

“분리발주 공공의 이익 매우 크다”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 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사신)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이 같은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 연구에서 공공공사(국가 및 지방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 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 원, 2만6,048명의 부가가치와 고용이 증진되는 등 분리발주의 공공의 이익이

건설정책연구원, 통합발주보다 예산절감 탁월해
부가가치·고용효과도...하자분쟁 등 우려는 기우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은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진국은 전기·소방·통신·설비공종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공종 간 마찰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지적하고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 장치 활용으로 해결될 것으로 현실성이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또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나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 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rt 발주

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호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증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통합발주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 공사에 일정비율 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경열 기자